

일본 극우재단의 국내·외
후원사업 사례연구

2021. 2
박정우

석사학위논문

일본 극우재단의 국내·외
후원사업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Japanese Far-right
Foundation and the Contribution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2021년 2월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신한류학과
박 정 우

석사학위논문

일본 극우재단의 국내·외
후원사업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Japanese Far-right
Foundation and the Contribution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2021년 2월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신한류학과
박정우

일본 극우재단의 국내·외
후원사업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Japanese Far-right
Foundation and the Contribution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지도교수 이 덕 일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신한류학과 한국학전공

박 정 우

박정우의 한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2월

심사위원장 윤창길 

심사위원 이철수 

심사위원 이덕길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목 차

목차	i
국문요약	ii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일본극우재단	4
1. 사사카와 재단	4
1) 사사카와 료이치	7
2) 사사카와 요헤이	10
2. 도요타 재단	16
제 3 장 국내 후원 사례	18
1. 낙성대경제연구소	18
2. 아시아연구기금	23
제 4 장 해외 후원 사례	28
1. 프랑스	28
2. 미국	29
제 5 장 결 론	31
참고문헌	34
Abstract	36

국문요약

일본 극우재단의 국내·외 후원사업 사례 연구

본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출현하는 ‘신친일파¹⁾’를 대상으로 일본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은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일본극우재단과의 관계성을 정리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만들었던 ‘식민지근대화론’을 재등장시킨 ‘신친일파’가 등장했다. 배후에는 일본 ‘도요타 재단’의 후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중진 자본주의’, ‘Catch up’ 이론 등 식민지 시대를 옹호하는 연구가 대거 부활했다. 일제가 유리하게 기록해 놓은 통계자료만을 인용해 당시 시대 상황과는 상관없이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①강제노역은 없었다. ②‘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 ③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 세 가지의 주장은 일본 극우파가 주장하는 논리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한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일본극우재단의 가장 대표적은 재단은 ‘사사카와 재단²⁾’이며 설립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으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파시스트 ‘사사카와 료이치’이다. 설립 당시 재단은 『일본선박진흥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다. 3)경정이라는 도박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1995년 사사카와 료이치 사망 후 2005년 7월 3대 회장으로 자신의 3남인 사사카와 요헤이가 회장직을 맡았다. 2011년 4월 1일부터는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⁴⁾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기존 극우의 이미지를 벗으려고 시도

-
- 1)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 안병직 교수가 있다. ‘아무튼, 주말’이라는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일본 동경대 교수로 1985년부터 3년간 재직하면서 사상적 전환을 겪었다고 밝혔다.
 - 2) 현재 공식 재단명은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이다. 이 외에도 사사카와 이름이 들어간 여러 산하 재단이 있다. 본고에서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사사카와 재단’으로 통칭 해서 사용하겠다.
 - 3) 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오락성 레저스포츠
 - 4) 본고에서는 ‘사사카와 재단’으로 통칭해서 사용

한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명 대학, 연구소, 쟁크탱크(Think Tank)⁵⁾ 등에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많은 돈을 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를 양성한다.

셋째, 국내 후원사례로 1988년 도요타재단의 후원으로 연구를 한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시작으로 ‘신친일파’가 등장했다. 1996년에는 사사카와 재단이 10억 엔(당시 한화 75억 원)을 출자해 연세대와 『아시아연구기금』을 설립해 논란이 되었다. 2019년 7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41회 정기회의’에서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우연은 참석한 자리에서 “강제노역은 없었으며, 임금도 오히려 일본인보다 많이 받았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에 함께 참여한 일본 극우 인사가 왕복 항공료와 5박 6일 체류 비용을 지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넷째, 사사카와 재단은 전 세계에 걸쳐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사카와 영리더 펠로우쉽 펀드 재단(Sylff; Ryoichi Sasakawa Young Leaders Fellowship Fund)’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부터 현재까지 44개국의 69개 대학과 컨소시엄에 각각 100만 달러의 기부금이 제공되었고 약 16,000명의 학생이 사사카와 재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재단은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한 방송에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비공식적으로도 “처음 만날 때 지인에게 50만 엔(약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더라”라며 “매번 그 돈을 받으면 1년에 1억 원이 넘는 액수를 받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많은 지원을 받고 친일로 돌아서는 사례에 대해 밝혀 충격을 안겼다. 프랑스와 미국 대학은 일본 극우재단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고, 지원을 축소하거나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다섯째, 이같이 ①일본 극우재단의 지원 ②⁶⁾부조적(浮彫的) 수법을 사용한 식민사학 연구 ③일본 극우파 정치인의 국내 정치용 선전 및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우호적인 여론형성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국면에서 식민지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정책연구소(政策研究所, 영어: policy institute)는 사회정책, 정치전략,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거나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기관

6)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에서 ‘자기 가설에 유리한 사례만 취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저자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활용된 방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제 1 장 서 론

최근 여러 대중매체에서 ‘신친일파’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파’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일본 극우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과거 ‘제국주의 시절’을 찬양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그런 태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단을 통해 한국 학자나 대학교에 후원을 통해 ‘일본 극우관’을 대변하는 ‘Speaker’를 계속해서 양성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 극우재단과 한국 내 학술기관과의 관계성과 후원사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1996년에 연세대 사학과 박영재 교수가 쓴 ‘일본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의 문제 – 사사카와 료오이치(笹川良一)의 경우 ’를 보면 당시 ‘아시아연구기금’ 설립 당시에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교내에 일본 극우재단이 출자한 10억 엔을 통해 ‘한일협력기금’이란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려다 연세대 평교수회와 학생들의 반발로 기금 설치를 취소한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형식상의 취소였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단 명만 바꾸어 ‘아시아연구기금’이란 이름으로 법인 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19년에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영훈 교수가 낸 ‘반일 종족주의’란 서적이 이슈가 되었다. 일본 극우 정치인이 좋아할 만한 주장이 넘쳐나는 책이었다. ‘식민지 시대는 살기 좋았다.’라는식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여러 항목별로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일본에서 번역본을 출판해 40만 부가 판매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용은 같고, 단지 ‘화자’만 한국인이다.

부조적 수법을 활용하여 역사를 호도하고,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곡된 시선으로 써 내려간 책이다. 서문부터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라고 표현하며 시작한다. ‘한마디로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모순되는 주장인지는 그 주장을 하는 본인이 한국 사람인 것을 망각한 듯하다. 본인이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철저하게 일본 극우파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본다. 한국 기사인 『삼

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의 나오는 우산국과 울릉도의 1차 사료는 철저히 의심하고, 외면한다. 그러나 ‘어느 일본인 학자의 지적’, ‘일본 극우 학자가 발표한 자료’는 신뢰하고, 본인의 주장에 인용하기까지 한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쓴 『신친일파』에서는 이영훈 교수가 언급한 『세종실록지리지』와 ‘독도 불법 편입 연도’가 다르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직접 사료를 찾아본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이며”⁷⁾라는 기록이 나온다.

당연히 이영훈 교수는 이런 기사의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확증 편향적’인 사료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리우미 유타카는 1928년 『조선총독부통계 연보』(표1-1참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인구와 우편저금 잔고에 대한 통계자료⁸⁾’를 인용하며, 인구의 2.45%인 469,043명의 일본인이 우편 저금⁹⁾의 86%인 26,481,546엔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인은 당시 인구의 97.55%인 18,667,334명인데도 불구하고 우편저금은 총합계의 14%인 4,305,957 엔에 불과했다는 자료를 찾아냈다. 계산하면 조선인 1명당 일본인은 245배나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양심 있는 일본학자나 일본에서 귀화한 학자가 당시에 상황을 고려한 자료를 찾아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연 ‘신친일파’인 그들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내세우며 학문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7)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

8) 도리우미 유타카(鳥海豊),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근대화론』, 지식산업사, 2019, 269

9) 旧植民地の郵便局への貯金、1900万口座・43億円残る、2010年 8月18日

<표 1-1> 1928년 조선 내 일본인과
조선인의 우편저금 잔액

	일본인	조선인
인구	46만명 (2.45%)	1866만명 (97.55%)
우편저금액	2648만엔 (86%)	430만엔 (14%)
1인당 저금액	56.46엔	0.23엔

필자는 앞서 밝힌 신친일파가 생성되고, ‘부조적 수법’과 ‘확증편향’된 자료를 인용하여 왜곡된 역사를 전달하는 이유를 ‘일본 극우파’와 그들이 운영하는 ‘일본 극우재단’과의 관계성에서 있다고 보고, ①일본 극우 재단의 형성과정과 극우 인물, ②국내·외 일본 극우재단관 관련된 후원 사례, 최종적으로 ③‘신친일파’의 연구를 극우 정치인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해보려 한다. 본 연구는 박영재 교수의 ‘사사카와 료이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일본 극우재단’과 ‘친일 학자들의 후원 관계’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일본 극우재단’과 ‘극우 인물’에 대해서 다룬다.

제3장에서는 국내 후원사례로 ‘낙성대경제연구소’와 ‘아시아연구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제4장은 ‘프랑스’와 ‘미국’의 해외 후원 사례를 통해 과거 극우 행적에 문제 삼고, 반발하여 거절하거나 일부 축소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례를 들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결론으로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신친일파’의 연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지를 본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제 2 장 일본극우재단

일본 극우재단이라는 용어는 다음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시 표현하는 재단임을 밝힌다.

- ① 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가담한 경우. 국제조약을 위반하거나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처벌받은 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재단
- ② 일제강점기 당시 전쟁을 위해 군납 물품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노역으로 징발해 노역을 착취한 기업이 운영하는 재단
- ③ 일본의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역사 관련 단체’에 후원하는 재단

1. 사사카와 재단

사사카와 재단¹⁰⁾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재단의 통칭이다. 공식 명칭은 ‘일본선박진흥회’에서 2011년부터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 중이다. 경마, 경륜 등 도박업체는 대부분 공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지만, 사사카와 재단은 다르다. 국가나 관청이 운영하지 않고, 사설 기관으로 경정¹¹⁾ 도박을 운영할 수 있는 특수한 재단법인이다. 현 회장인 사사카와 요헤이는 일본 내 정·재계와의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경정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제재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1957년 『모터보트 경주법』이 「제19호 교부금」 제도로 개정되어 교부금 명목으로 3.3%(2007년부터는 2.6%로 변경되었다.)를 관할 지방자치제가 국고로 납입한다. 일본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로 인해 보트 레이스 사업은 막대한 수익금을 벌기 시작한다. 경정으로 번 수익금은 해양·공익·복지·국제 협력 등 보기에는 평범한 공익

10) 2차세계대전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재단을 통칭해서 ‘사사카와 재단’이라 부른다. ‘일본선박진흥회’를 시작으로 2011년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으로 재단 명을 변경하였다. 전 세계 쟁크탱크, 대학, 연구소 등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일본에 우호적인 친일파를 양성하는 재단이다.

11) 일본 내에서는 경정 대신 ‘보트레이스’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설립자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1995년 사망한 후 전범의 이미지를 벗으려 추대한 2대 회장인 소노 아야코¹²⁾에 이어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사카와 료이치의 3남인 사사카와 요헤이가 3대 회장을 맡고 있다.

재단 특성을 보면 일본 특유의 문화인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로 나뉘서 볼 수 있다. 겉으로는 건강 관련 프로젝트나 UN, 세계 보건기구(WHO)와 함께 재해 복구나 한센병, 아프리카 기생충, 기아 퇴치 등과 관련해서 연구비나 지원금으로 수억 달러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사카와 재단이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따로 있다. 바로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소, 쟁크탱크(Think Tank) 등지에 뿐 리는 돈이다. 학자들과 언론인들에게는 많은 돈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일파 내지 친일파를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속내에는 자신들의 ‘극우 역사관’을 대신 전하는 ‘스피커’가 필요해서다.

한 일례로 1998년 ‘¹³⁾히가시나카노 슈도(東中野修道)라는 일본의 극우 학자가 논란의 중심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가 집필한 서적인 『난징학살의 철저검증(A Thorough Review of the Nanjing Massacre)』을 보면 “난징에서 학살은 없었다.”라는 내용이 실려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난징대학살 당시 8살이었던 ‘샤수친¹⁴⁾’은 ‘일가족 9명 중의 7명이 살해당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었다. 구체적이고, 귀를 의심할 만큼의 참혹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극우 학자 ‘히가시나카노 슈도’는 책에서 ‘샤수친’의 증언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자신의 책에 실었다.

생존자 ‘샤수친’은 책을 출판한 일본의 ‘¹⁵⁾덴덴샤(展轉社)’라는 극우 출판사와 저자인 ‘하가시나카노 슈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2월 도쿄 고등 법원은 ‘히가시나카노 슈도’의 책 내용이 샤수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00만 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 일본 극우 학자를 지원해준 곳이 바로 사사카와 재단이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 사실 vs 허구, 한 역사학자의 진실 탐구(The

12) 소노 아야코(曾野 綾子, 1931년 9월 17일-)는 일본의 여성 작가이다. 일본 보수론자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는 ‘약간의 거리를 둔다.’라는 애세이집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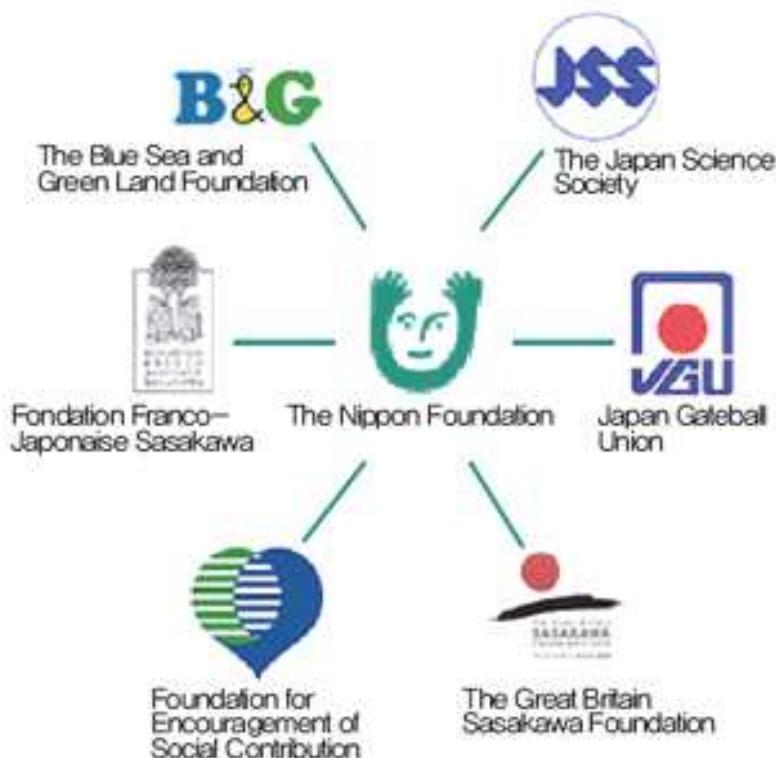
13) 히가시나카노 슈도(東中野修道)는 ‘사사카와 재단’의 지원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극우학자이다. 사사카와 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다. “난징에서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14) 샤수친(夏淑琴, 1929년 5월 5일생). 1937년 12월 13일 오전,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그녀의 가족 9명 중 7명을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당시 8살에 불과했던 그녀와 4살의 여동생 샤수원(夏淑雲)씨만 극적으로 생존하였지만 그녀 역시 일본군에게 칼로 세 번 정도 찔렸다며 당시를 증언하였다.

15) 일본의 보수주의, 우익사상, 민족운동, 국사국학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소송을 각오하고 출판을 할 정도의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출판사이다.

*Nanking Massacre: Facts versus Fiction, A Historian's Quest for the Truth』*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해 유럽과 미국 주요 대학에 배포한 것 또한 바로 사사카와 재단이었다. 그들은 처음 설립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일본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왜곡도 서슴없이 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 사건처럼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일본학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심한 ‘일본 극우관’으로 무장한 집단이 바로 ‘신친일파’로 불리는 까닭이다.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모인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일본 극우파 논리를 대신 알리는 스피커(Speaker)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일본 극우재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림 2-1] 세계 곳곳에 있는 사사카와 재단의 산하 재단

1) 사사카와 료이치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¹⁶⁾는 1899년 5월 일본 오사카에서 토요가와촌에서 아버지 사사카와 츠루키치와 어머니 테루 사이에서 태어났다. 1916년 17세에 오사카 해군 비행대 제2연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다. 2년간 군에 복무를 마친 뒤, 상등병으로 제대했다. 1926년에 「국방사(國防社)」라는 우익단체를 결성한 후 우익의 길로 들어선다. 1931년에는 오사카 「정우회」 원외단¹⁷⁾이 만든 「국수대 중당(國粹大衆黨)」의 총재로 추대된다. 1932년에는 「국수대중당」에 국수의용 항공대를 설립하고 ‘1인 1기 1함 격멸 주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구호는 후에 ‘카미카제 특공대’로도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열렬한 팬이었다. 본인 당원에게도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이 입는 흑색 국방복을 착용하게 할 정도였다. 40세가 되던 해인 1939년에는 「야마토호」를 타고 독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꿈에 그리던 베니토 무솔리니와 단독회견을 하게 된다.

사사카와 료이치가 엄청난 부를 갖기까지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 바로 ‘코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¹⁸⁾’이다. 1941년 11월 28일 코다마 요시오는 사사카와로 인해 상하이(上海)에서 군 물자 조달을 위한 기관으로 「코다마 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군수 물자, 군자금 확보 외에도 정보수집이나 공작을 수행하는 역할로도 활약한다. 육군에서는 사토미 하지메를 기관장으로 하는 「사토미 기관」을 통하여 「광제선당(廣濟善堂)」이라는 곳을 만들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아편 환자를 재활하는 곳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편 밀매를 통해 군자금을 조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사사카와 료이치는 해군에서는 「코다마 기관」, 육군에는 「사토미 기관」을 활용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 당시 금액으로 1억 엔에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사사카와 료이치에게는 엄청난 자금줄이 되어준 셈이다.

16) 박영재, “특별기고 : 일본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의 문제 - 사사카와 료오이치 (笹川良一)의 경우”,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 10권0호, 1996.9-18.

17) 의원이 아닌 정당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뜻함.

18) 코다마 요시오(1911년 2월 18일~1984년 2월 17일)는 일본의 극우 운동가이다. 폭력 조직 금정회의 고문이었으며, 일본 정치, 경제 지도자들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며, 분쟁을 해결했다. ‘흑막’, ‘해결사’(fixer), ‘우익의 거괴’라고 불린 거물이었다. 1976년 일본 사상 최대의 정치자금 스캔들인 류히드사건에 연류되기도 했으며, 1984년에 자신이 CIA 공작원이었음을 고백한 뒤 발작으로 사망하였다.



[그림 2-2] 사사카와 료이치(좌)와 무솔리니(우)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1945년 12월, 사사카와 료이치는 ‘초국가주의적 폭력적 결사 및 애국적 비밀 결사의 주요 인물’로 체포된다.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으로 스가모 형무소에 갇힌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코다마 요시오’, ‘기시 노부스케(岸信介)¹⁹⁾’등 정재계 인사와 조우하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사사카와 료이치는 감옥에서 막대한 부를 불려줄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된다. 미국 시사 잡지인 <라이프>지를 보고 ‘모터보트 레이스’ 사업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석방되자마자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경정도박 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해 바로 행동으로옮긴다. 1951년 사사카와는 ‘모터 보트 경주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평소 관계가 돈독했던 자민당 의원들의 지지로 손쉽게 통과시킨다. 이후 ‘전국모터보트경주연합회’(약칭 ‘전모련’)를 설립하고, 1955년 회장에 취임한다. 그리하여 1962년에는 지금의 일본재단의 전신인 ‘일본선박진흥회’를 설립하기에 이른

19)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이자 제56-57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지냈다. 태평양 전쟁 이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쟁 범죄 용의자로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일본 제90·96-98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아베 신조의 외조부로 알려져 있다.

다. ‘일본선박진흥회’ 1대 회장과 ‘전모련’ 회장까지 모두 겸임한 사사카와 료이치는 이로써 경정에 관한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사사카와 료이치’는 경정도박으로 얻게 된 자금력으로 정·재계 로비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설립 당시 자산액 1억 3천만 엔이었던 ‘일본선박진흥회’는 1980년이 되면 무려 ‘1천 2백 44억 6천만 엔’에 달했다. 1990년에는 경정 사업으로 2조 2천억 엔에 매상을 올리는데, 3.3%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려 7백 26억 엔에 달했다. 이 금액은 각 방면에 교부금으로 사용된 것인데, 실제로 대단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조성재단센터(JFC, 助成財団センター)²⁰⁾에 나와 있는 ‘일본에서 조성된 재단의 자산 총액 상위 100개 자산 순위’ 항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1위가 ‘일본재단(사사카와 재단)’으로 2천 7백 65억 9천만엔, 3위는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1천 3백 89억 6천만 엔으로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사사카와재단의 자산 총액(2018년 기준)²¹⁾

재단명	자산총액	연간조성액
일본재단	276,591,569	33,453,697
사사카와평화재단	138,963,005	839,951

사사카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막대한 자금이 나오는 ‘경정 도박 사업’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다. 모터보트와 관련된 각종 부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체에 막내 동생 료헤이(了平)와 3남 요헤이(陽平) 등 아들들을 비롯한 친인척들을 관련 자리에 앉혀 가족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견고한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영을 이어나가게 된다.

20) 조성재단자료센터(JFC, 助成財団センター)는 일본 내에 민간재단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일본 내 조성재단 등에 관한 자료 · 문헌 등 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다.

21) 조성재단자료센터 100개 재단 순위

1) 사사카와 요헤이

1939년 1월 8일생으로 ‘일본선박진흥회’의 설립자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陽平)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가족경영의 수혜로 인해 1989년에 ‘일본선박진흥회’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1995년에 아버지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사망하고, 이어 극우론자이며 소설가인 ‘소노 아야코’가 회장에 취임한다. 이후 2005년 7월에 ‘사사카와 요헤이’가 3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평소 사사카와 요헤이는 정·재계 인맥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자신의 블로그²²⁾로 소통하거나, 자기 생각을 공유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극우의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 ‘일본선박진흥회’에서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을 위한 후원이나 기아, 난치병을 겪는 어린이 지원, 조선 대출 사업, 해양 오염, 한센병과 같은 질병과 차별을 없애는 곳에 지원하는 자선사업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한센병 퇴치 대사’와 ‘한센병 인권 계발 대사’를 맡는 등 외부 자선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사사카와 재단이 집중하는 곳이 있다. 사사카와 재단은 일본 내 극우 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극우 학자라 함은 ‘역사 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 왜곡’과 ‘전쟁 미화’를 위해 활동하는 학자를 말한다. 평소 사사카와 요헤이의 평소 발언이나 활동, 재단의 연구비 지원처를 살펴보면 요헤이의 ‘극우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평소에 자신의 블로그에 많은 글을 올리는 걸로 유명한데 그중에서는 ‘위안부’ 동상에 대한 발언이나 ‘평화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주창하는 것을 봤을 때, 사사카와 료이치 못지않은 극우적인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2월 24일 사사카와 요헤이는 본인의 블로그에 '위안부 동상을 둘러싼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했다. 일본 극우 정치인이 극도로 꺼리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포스팅이었다.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전부터 소박한 의문을 가져왔다. 동상은 어떻게 봐도 10대 초반의 소녀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오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각종 자료를 봐도, 그렇게 어린 ‘위안부’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가운데, 문제의 소녀상은 2002년 6월 13일에 일어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암사 사건’으로

22) <https://blog.canpan.info/sasakawa> 2005년 제작된 일본 재단 공익 커뮤니티 사이트 "CANPAN"

사망한 당시 14세의 두 여중생을 애도하여 만들어진 기념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알았다. 동상은 사건 후, 민족미술협회에 소속된 부부에 의해 제작되어, 격렬한 반미투쟁 속에서, 미군기지 근처에 설치를 시도했지만,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채 보존되고, 그것이 위안부 동상으로 사용되었다. 소녀상 옆에 의자가 있는 것은, 사건에서 희생된 또 한 명의 소녀가 여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진위는 알 수 없다.”

이어서 “위안부 소녀상은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50개 이상이 설치, 일본군이 소녀까지 위안부로 징용하고 있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일본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글과 함께 효순이, 미선이 피해자 사진과 위안부 동상의 사진을 같이 올리며 “닮지 않았습니까?”라며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米軍車両で亡くなったお二人の写真



上記の亡くなられた人に似ていませんか？

[그림 2-3] 사사카와 요헤이 블로그 ‘위안부’ 발언 부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일본 극우파는 사실 확인도 안 된 정보를 마음대로 각색하고 훌리며,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의도가 있어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 까지 벼젓이 인용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본 재단에서 추구하는 자선사업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모습이다. 실제 ‘위안부’ 소녀상 모델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만든 작가 부부인 김운성, 김서경 씨의 딸인 ‘김소흔’ 양이다. 그리고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위 내용에서

“동상은 어떻게 봐도 10대 초반의 소녀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오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각종 자료를 봐도, 그렇게 어린 '위안부'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像はどう見ても10代前半の少女で、慰安婦問題に対する誤解をさらに増幅させている。各種資料を見ても、そのように年若い「慰安婦」はいなかつたはずである。)”는 부분이다.

이는 국내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낙성대 경제 연구소가 주장하는 “위안부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인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각종 자료를 봤다고 하지만 생존자의 증언은 역시 이들에게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또한, 1992년 1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가 일본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최초로 발견한 일본군이 남긴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서는 자료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 문서가 발견되면서 1993년 ‘고노 담화’로 이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카와 요헤이는 이런 사실은 애써 부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사카와 요헤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다. 2012년 9월 14일에 산케이신문에 기재한 ‘미얀마 외교의 재건을’이라는 글에 내용 중 일부이다.

《강인함의 필요함》

“쿠릴 섬, 독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은 말해 무엇하랴. "배려 외교"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의 정치이론가 마키아벨리는 겸 양의 미덕으로 하면 상대의 거만함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실수를 저지르는 함정에 빠진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혐일 반일보다 친일 색채가 강한 우방과의 관계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선 강화돼야 한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봉쇄하는 이 대통령의 언동에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외교가에는 예측 불허의 사태는 따르기 마련이다. 시대에 맞는 강인함, 강세함이야말로 요구된다. 미얀마 외교는 그 시금석이 된다.”

다음 글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이다.

“50년 전 하와이에서 국제회의에서 한국인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을 때 한

국인들이 회의와는 관계없이 일본해의 호칭에 대해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이다"라고 발언해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이제 미국의 지도도 "일본해 — 동해"와 병기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재작년 한·미·일이 한 도상 작전 지도가 "동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카와 평화 재단'이 미국 측에 클레임을 붙이면 한국은 시끄러우니 원만하게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려했다고 변명했다고 듣는다.(당시 한국은 원만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전문가로서도 마찬가지다. 거짓말도 백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고 한다. 한국의 "고자질 외교"는 민간에도 철저하다. 위안부 동상을 세계에 설치하기 때문에 관민 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보다 훨씬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외교 안건에 관해서는 정부의 전관 사항에만 무관심하다. 이제 위안부 문제는 대만 필리핀에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통인 산케이신문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²³⁾씨는 한국의 역사 인식을 "지금부터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역사로 해온 민족"이라고 갈파 당한 적이 있다. 어른의 대응으로서 정관 하는 자세는 이미, 통용되지 않는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 한국의 잘못을 세계에 호소하지 않으면 현재의 한 일 분쟁과 관련해서도 한국에 동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내년에는 올림픽이 열린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거부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찬반을 떠나 사정을 모르는 많은 나라가 귀를 기울일지 모른다. 한국은 많은 종목의 국제위원회에 임원을 보낸다. 가라테를 흉내 낸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한국은 검도도 한국에서 비롯됐다고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어른의 대응' '침묵은 돈'은 일본의 상식일 수는 있지만, 세계의 비상식일 뿐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다. 국제 해사기구(IMO)도 국제해양법재판소도 국제선거에서 한국인이 최고책임자로 당선됐다. 예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그랬다. 미국 의회에 대한 영향력도 솔직히 일본은 한국 대만에 못 미친다. 국제사회는 「옳은 것이 올바르게 평가된다고는 할 수 없는 세계」이다. 귀찮더라도 관민 모두 함께 일본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번 분쟁도 잘못이 한국에서 있다고 꿈만 꾸며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3) 1941년 오사카 태생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 주재 특별기자 겸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극우인사이며, "한국 발전은 일본이 남긴 자산 덕분"이라거나 "독도, 한국과 일본 공동소유로 하자"는 등에 극우발언으로 유명하다.

글 내용은 보았을 때, 일본이 하는 것은 진실이나 한국이 떼를 써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식의 논리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카와 요헤이는 재단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곳은 ‘국제역사논전연구소(國際歷史論戰研究所)²⁴⁾’라는 곳이다. 그곳에는 후지키 슌이치²⁵⁾, 역사인식문제연구회²⁶⁾의 니시오카 쓰토무²⁷⁾ 등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극우 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다. 후소사(扶桑社)²⁸⁾라는 극우 출판사를 통해 『개정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출판했는데, 대표적인 극우 판을 가진 역사 왜곡 교과서다. ‘난징 대학살²⁹⁾’을 ‘난징 사건(南京事件)’으로 격하하거나 ‘위안부(慰安婦)’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1996년 ‘쿠마라스와 비 보고서’를 시작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 중이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축소하고, 감추는 데에만 급급하다.

이 교과서는 영토에 관해서도 주변국과 많은 마찰을 빚는 내용을 싣고 있다. 독도, 조어도 제도, 쿠릴 열도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극우 관점으로만 역사를 바라보는 교과서이다. 위에 제시한 ‘사사카와 요헤이’의 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우익교과서 반대 운동을 펼쳐온 결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관여한 지유샤(自由社) 역사 교과서 점유율이 0.1%에서 최근 아예 퇴출당했다는 것이다.

사사카와 요헤이도 이들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다는 듯이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객관적인 기록은 은폐하고, 모르쇠 하는 데 급급

24) 국제역사논전연구소(國際歷史論戰研究所)는 2018년 일본 극우 성향의 학자들이 설립한 극우 역사단체다. 회장을 맡고 있는 ‘스기하라 세이지로’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7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극우 인물이다.

25)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운동을 하는 국제경력지원 협회(ICSA) 소속인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이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이후연 연구위원을 UN 인권이사회에 초청해 발언하게 만들기도 했다.

26)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위안부’문제, 강제징용, 난징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극우 역사 연구모임이다, 역사왜곡과 극우적 성향이 가장 강한 단체다.

27)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이자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 허구라 말하며 ‘강제연행설 허구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일본극우논객이다.

28) 후지산케이그룹(Fujisankei Communications Group) 산하에 있는 극우출판사이다. 후지TV, 산케이신문, 닛폰방송, 포니캐넌, 분카방송 등의 계열사가 있다.

29) 1937년 중일전쟁 때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저지를 대규모 학살 사건. 중국에서는 30만 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몇만 명 정도로 피해자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극우세력의 경우에는 아예 난징대학살 자체가 날조된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다. 이런 태도가 한·일 양국에 부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한국의 경제력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피해를 보는 때는 지났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불매운동을 통해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듯이 이런 분쟁은 일본에도 득이 될 것이 없는 게 사실이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해 정치·외교·안보를 지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함이 당연하다.



[사진 2-4] 사사카와 요헤이와 아베 전 총리

2. 도요타 재단

도요타 재단은 도요타자동차 5대 회장인 도요다 에이지(豊田英二, 1913년 9월 12일~2013년 9월 17일)가 1974년 10월 15일에 설립한 재단 명칭이다. 사사카와 재단과 비교해 그 범위나 금액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토요타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식민지근대화론'을 다시금 부활하게 만든 사례를 들어 포함하였다.

2006년 12월 4일에 실린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안병직 교수와의 인터뷰³⁰⁾ 내용이다.

-안병직 교수와 이영훈 교수가 공동연구를 진행한 두 저작 <근대조선의 경제구조>(1989년),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1992년)가 일본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도요타(豊田)재단으로부터의 연구비 수령에 대하여 1988년으로부터 3년간 동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고, 16명의 한일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세 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에는 지원 사실을 밝히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서마다 연구비 수령 사실을 밝혔다."

-도요타재단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은 300만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예비연구를 위해서 100만엔 더 지원받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그 연구비 지원으로 쓴 책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1989년)의 서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연구는 일본의 豊田財團으로부터 1988년에
「韓國의 經濟發展에 관한 歷史的 研究」라는 테마로 연구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同財團에 대하여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편집자의 한 사람으로서

安秉直

1989년 11월

[사진 2-4] <근대조선의 경제구조>서문 발췌

30) 안병직·이영훈, 일본 돈 받은 '식민지 연구', 오마이뉴스, 김종성, 2006. 12. 04

안병직, 이영훈의 대담 형식으로 풀어 쓴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2007)』에서 보면 중진 자본주의를 주장한 학자인 ‘나카무라 사토루’가 도요타 재단에 요청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의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1987년 가을 한국 측 안병직 교수(서울대)와 일본 측 나카무라 사토루 교수(교토대)의 주동으로 ‘식민시기 한조경제’에 대한 ‘한일 공동연구팀’이 ‘한국근대경제사연구회’란 이름으로 만들어지다. 총 16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연구회의 구성멤버는 다음과 같다. (한국 측 8명, 일본 측 7명). 박현채-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나카무라사토루, 안병직-중진 자본주의론

<한국 측> 안병직(서울대), 이대근(성균관대)-주변부 자본주의론, 오두환(인하대), 이영훈(성균관대), 장시원(방통대)-총장, 허수열(충남대), 이현창(고려대), 정재정(방통대)

<일본 측> 나카무라 사토루(京都大), 가지무라 히데키(神奈川大), 기무라 미즈히코(名古屋學院大), 미야지마 히로시(東京大), 호리 카즈오(京都大), 요시노 마코토(東海大), 마쓰모토 다케노리(東京大)

이들을 통해 연구서 3권을 양국에서 동시 발간하였다. 그렇다고 일본 측 인사가 모두 극우의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일본 측 인사 ‘호리 카즈오(京都大)’는 1987년 『태정관 지령』을 근거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밝히는 ‘학자의 양심’을 지키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영훈은 같이 연구했던 일본인 학자도 인정했던 독도를 향해 이렇게 반문한다. “한국 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선명한 증거는 제시됐지만, 역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일본을 위한 발언을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역사를 돌아보면 된다.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제 3 장 국내 후원 사례

1. 낙성대경제연구소

1987년 4월, 당시 안병직 서울대 교수와 이대근 성균관대 교수가 함께 경제사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 연구소다. 설립자인 안병직은 1936년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서울대 교수 당시 많은 학생에게 정신적 지주였을 만큼 운동권 대부로 불렸던 그였다. 1960년대에는 모택동의 이론인 ‘식민지 반봉건사회론(植民地半封建社會論)³¹⁾’을 추종했을 만큼 매우 급진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던 그가 1980년대 일본 교토대 교수인 나카무라 사토루의 ‘중진 자본주의’를 접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다. 마침 1980년 초에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부에서 교수 제안이 들어온다. 1970년대 당시 학생운동권의 사상적 지주 역할을 했던 그였기에 고민하던 그는 1985년 봄에 결국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85년부터 2년간 동경대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 언론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본인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 본인이 믿었던 ‘식민지 반봉건사회이론’을 비판할 정도로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후 안병직 교수가 중진 자본주의를 본인 식으로 해석한 ‘캐치업 이론(Catch-up)³²⁾’까지 나오게 된다. 당시 제자였던 이영훈은 운동권의 대부였던 스승이 일본에서 돌아온 자신의 스승인 안병직이 중진 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다고 표현했다. 그 정도로 변해서 돌아온 건 1987년이다. 이후부터 한국에서 ‘일본 극우 관’으로 무장한 ‘뉴라이트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

이후 낙성대경제연구소를 가장 폭발적으로 알린 인물이 있다. 바로 안병직 교수의 제자이자 ‘반일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영훈 교수다. 최근 ‘신친일파’라는 단어가 매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데 큰 일조를 한 인물이다.

31) 식민지나 종속국은 자립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체제이론

32)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제1파동, 제2파동, 제3파동으로 나눠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이들의 주장은 하나의 결과로 귀결된다. “식민지를 통해 조선이 발달했다.”라거나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며, 일본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의 부활을 알린 대표적인 출처가 바로 ‘낙성대경제연구소’인 것이다. 이영훈은 “식민지배 기간 강제동원이나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 같은 반인권적 만행은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가 버젓이 생존해 있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 이영훈은 2004년 9월 2일 MBC 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과거사 진상규명 논란’ 편에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2004년 9월 6일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이 이곳을 견학하도록 제가 적극 권장을 하고, 기회가 닿으면 함께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³³⁾ 그러나 이영훈은 15년 뒤인 2019년 ‘반일종족주의³⁴⁾’라는 책으로 또 한 번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의 논리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와 같다. 때로는 일본 제국주의자보다 더 우경화된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미화를 위해 선전용으로 사용했던 ‘식민지근대화론³⁵⁾’을 주장하며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기록했던 왜곡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학술적으로 봐달라고 말한다. 모든 연구에는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정성적인 평가도 간과하면 안 된다. 자료 출처와 더불어 당시 시대 상황, 생존자의 증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기도 한다. 이미 본인이 내세우는 주장 속에서 편향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영훈 교수가 내세우는 논리는 학문보다는 정치에 가까운 평론을 하고 있다. ‘반일종족주의’에서 내세우는 첫 번째 주장은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다. 만약에 그 전제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연역법을 적용하면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영훈 본인이 한국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가 주장하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성이 놓후해진다. 본인 말이 사실이라면

33) MBC<100분 토론> 2004.09.02

34) 2019년 집필한 ‘식민지근대화론’을 담은 이영훈의 책

35) 식민지 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은 쇼와 천황의 한국 식민 지배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이다. 스즈키 다케오는 종전 후 일본에 돌아가 「조선 통치의 성격과 실적」이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일본에 의해 한국은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었다. 1945년 이후 '식민지근대화론'의 출발점이 된 글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 일본인이라는 말인가? 책 내용은 일본 극우파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책은 곳곳에 부조적 수법을 사용해서 역사와 국민을 호도한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내용 같아 느껴진다. 근거와 상황을 보면 결국 본인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샤머니즘 운운하는 내용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 매번 이야기 하는 게 자료, 자료의 중요성을 그렇게 주장했으면서 결국은 샤머니즘이다. 전태일 열사에 곁에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의 눈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경제를 들여다보는지 알 수 없다. 일본에서 돌아와 충격을 받았다던 그 사람은 없어지고, 일본 극우파의 추종자만이 남아있다.

1989년 및 1992년에 이영훈·안병직 두 교수는 지난 일본 도요타 재단(豊田財團)의 자금 지원을 받아 16명의 학자가 식민지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도요타 재단이 지원한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였다. 자금 지원의 결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1989년에 발행된 <근대조선의 경제 구조>(이하 1989년 연구)와 1992년 출판사에서 발행된 <근대조선 수리조합 연구>(이하 1992년 연구)가 있다. '1차 공동연구'로 불리는 일본 학자 7명과 한국 학자 6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2차 공동 연구는 각각 2명씩 4명으로 진행되었다. 한·일 합쳐 14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이 연구로 집필된 책들은 현재까지 '식민지근대화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도요타 재단³⁶⁾의 자금을 받은 학자는 총 14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당시 성균관대 교수),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³⁷⁾ 등 당시 교토대학 경제학부 교수 등이었다. 특히 나카무라 사토루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 다른 이름의 이론인 '중진 자본주의'를 주창한 핵심 인물이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도요타재단의 자금을 받고 이 연구에 대거 참여한 셈이다.

36) '도요타 재단'은 도요타 기업이 1974년 30억 엔을 출연해 세운 사회복지 재단이다. 설립목적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사업과 국내 시민사회 지원, 국제 구호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뉴라이트 단체에 연구비 명목으로 후원을 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37) '중진 자본주의'를 주창한 교토대학 교수.

도요타 프로젝트 이후 한국 사회에는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본격적으로 유포되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한국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는 논리가 낙성대경제연구소를 통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도요타 재단의 지원이 있었고, 그 연구비 후원금을 성사시킨 인물이 바로 '나카무라 사토루'인 것이다. 그 후에도 한국에서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를 받고 연구하는 학자나 학생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 모든 지원이 일제강점기를 대변하는 연구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지원 속에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이후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을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5~2008년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추가 지원을 받기도 했다. 연구소를 책임지는 이영훈(現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이승만 학당 교장)의 주도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전시기/해방기(1937~1950년) 한국 농촌사회의 변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영훈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난 사례로 2006년 12월 6일에 MBC <뉴스 현장> '뉴스 초점' 코너에 출연해 황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다. "일제시대 공공연한 토지 수탈은 없었다.", "위안부 강제동원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위안부 영업자의 절반은 조선 사람이었다. 그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 동원했겠느냐.", "지배는 지배고, 연구는 연구다. 강제지배를 하니까 연구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오늘 날 우리가 행복할 조건을 과거에 침략한 사람이 해주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 중에서 마지막 발언은 과거의 친일파가 가진 논리와 다를 게 없다. 이 외에도 2008년 독도 관련 발언에서도 "사실 일본도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일본보다 법률적, 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꼭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나라의 구성 요소인 주권, 영토 등이 없었다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저 독립단체였을 뿐이고 진짜 건국은 1948년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위 발언들은 도요타 재단의 지원금으로 한 연구에서 출발한다. 일본 학계와 교류를 통해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극우파가 국제사회에 이용하기 좋은 소재가 된다.



[사진 3-1] UN 인권이사회에서의 이우연 연구위원

그 결과 중 하나의 예로 바로 ‘순이치 후지키’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의 지원을 받고 ‘UN 인권이사회’에 간 이우연 연구위원이 언론에 노출된 것이다.³⁸⁾ “많은 한국인 노무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던 것이며 그들의 임금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구분 없이 임금은 공평하게 지급됐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임금이 더 높았습니다. 전쟁 기간 한국 노무자들은 쉽고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당시 ‘순이치 후지키’도 함께 있었는데, 그도 “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ICSA(국제경력지원협회)³⁹⁾ 소속이다. 그는 이우연 연구위원에게 스위스 제네바까지의 왕복 항공료와 5박 6일 체류 비용까지 모두 지원했다. 일본 극우단체는 피해국의 당사자인 한국인 학자가 직접 나와 ‘UN 인권이사회’에서 ‘피해는 없었다.’고 발언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국제사회에 확실한 선전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듯 ‘극우의 스피커(Speaker)’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는 곳이 ‘낙성대경제연구소’이다.

38) 2019. 08. 25, YTN 보도 "강제동원 없다" 한국 학자의 UN 발언...日 극우 기획

39) 국제경력지원협회(International Career Support Association)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단체

2. 아시아연구기금

아시아연구기금(ARF; The Asia Research Fund)은 본고에서 설명한 사사카와 재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재단이다. 일본 내에서도 연구자들이 사사카와 재단(The Nippon Foundation)의 자금을 꺼릴 정도로 극우 인사가 가장 많이 포진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시아연구기금은 초기에 사사카와 재단이 10억 엔(75억 원)을 출자하여 연세대와 공동으로 1996년 6월 25일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 재단이다.

아시아연구기금이 설립되기 전인 1995년 12월 당시 연세대 송자 총장이 사사카와 재단의 10억 엔(당시 75억)을 받고 ‘한·일 협력 연구기금’을 설치하려고 시도 했다. 하지만 연세대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일본 극우재단의 자금이 연세대로 유입되지 않고 끝이 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당시 연세대 송자 총장은 민족을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에 결국 검은돈을 끌어들이고 만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름만 바꿔 사사카와 재단이 낸 돈 10억 엔으로 연구 후원재단을 설립한다. 그렇게 ‘아시아연구기금’이 국내에 세워졌다. 처음에는 연세대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정치 성향을 배제한 이공계나 기초의학 분야에만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사사카와 재단 쪽에 제안한다. 연세대도 ‘사사카와 재단’의 극우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니 그런 제안을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사사카와 재단’은 일언지하에 제안을 거절한다. 이유는 본인들이 지원한 돈으로 하여금 연구 방향에 대해 일정부분 개입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2005년 4월 5일에 방영한 PD수첩 ‘친일 청산의 무풍지대, 학교’ 편은 국민에게 ‘사사카와 재단’을 각인시킨 방송이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일본 르포라이터인 카마타 사토시는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재단⁴⁰⁾은 지원 요청한 곳들을 살펴보고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에 준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치적 목적이 없는 순수한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아시아연구기금’의 법인 설립목적을 보면 ①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 ②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③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산업협력, ④기타 아시아지역에 관련된 학술연구 및 교류사업 등을 등

40) 사사카와 재단의 명칭. 영문으로는 ‘Nippon Foundation’라 칭한다. 일본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기금은 ‘The Japan Foundation’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정부기관과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기사항에 기재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일본 극우파들에게 대입하면 가장 위험한 주제가 된다. 실제로 ‘아시아연구기금’에 포함된 일본 측 임원들 면면을 보면 역사 왜곡을 빈번하게 하는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⁴¹⁾’ 회원이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라는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극우적인 안보관을 가진 인사가 주를 이룬다. 일제강점기를 살기 좋았던 곳으로 미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자들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다. ‘사사카와 재단’ 설립자인 사사카와 료이치는 ‘대동아공영권⁴²⁾’을 주장했던 허무맹랑한 꿈을 버리지 못했던 일본을 대표하는 극우의 아이콘이기도 했다. 그런 극우 인사로 구성되어있는 재단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어느 누가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시아연구기금’은 설립 당시 한국 측 16명, 일본 측 7명의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한 것이 연구기금의 설립 목적을 내세웠다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운영진과 임원들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일본 측 인사를 보면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2005년 연세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낸 자료집 「누가 일본 극우세력의 검은돈, ‘아시아연구기금’을 연세로 끌어들였는가?」를 보면 ‘아시아연구기금’ 당시 일본 측 인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우선 ①사토오 세이자부로오(佐藤誠三郎, 전 동경대학 교수)는 파시스트를 자처했던 사사카와 료이치를 미화하는 자서전을 집필했었다. ②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는 일본 외교관 출신으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이사를 했던 이력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싸운 것은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위한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아시아연구기금’의 프로그램 위원으로 참여한 ③시게무라 토시미츠(重村智計)는 새역모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타쿠쇼쿠(拓殖)대학 교수이다. 그는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우익출판사 광문사(光文社, 1997년)에서 출판한 『한국병과 조선병(韓國病と朝鮮病)』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을 비하했던 학자와 같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국가적 자존심’도 버리면서까

41)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왜곡된 일본극우관이 반영된 역사교과서, 임나일본 부설, 식민지근대화론을 부각시키고, ‘위안부’, 난징대학살, 강제징용 등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왜곡교과서이다. 극우출판사인 자유사(自由社)와 후소사(扶桑社)가 대표적이다.

42)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까지 아시아가 서양 세력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려면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대동아공영권을 결성해서 서양을 몰아내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침략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쓰였다.

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설립 후에도 ‘아시아연구기금’의 일본 측 임원진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와 일본재단의 관계자들이 계속 유입되었다. 사사카와 재단의 입김이 없고서는 선정되리 만무하다. 2000년부터 이사로 참여한 ④우타가와 레이조(歌川令三)는 마이니치신문 편집국장 출신이다. 사토오 세이자부로오(佐藤誠三郎)와 함께 ‘⁴³⁾나카소네평화연구소’ 창립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재단’의 국제 담당 상무이사이기도 했다. ⑤오오노 슈우이치(大野修一)는 일본재단의 직원 출신으로서 당시 일본재단의 상무이사이다. 2001년부터 재무위원 및 프로그램 위원으로 아시아 연구기금에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럼 한국 측 인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우선 일본 극우관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사로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있다.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이란 강의에서 학생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어 나라가 떠들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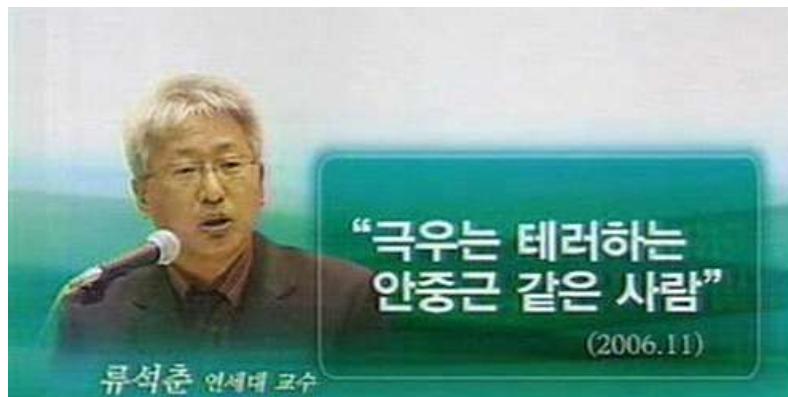
학생이 류석춘 교수의 수업을 듣는 중에 “매춘부랑 예전의 ‘위안부’를 지금 동급으로 보시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라니까.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위안부는 어느 시기나, 어느 장소에서나 남자들이 모이는 군대가 있으면 그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일종의 공창제도를 만들게 돼요.” 이 발언으로 인해 류석춘은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세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 당국이 역사 앞에 심각한 과오를 저지를 것”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류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의 번복은 없었다. 류석춘 교수는 과거에도 본인이 가진 ‘일본 극우관’을 그대로 드러낸 적이 있었다.

2006년 ‘경향신문’이 주관한 ‘진보 개혁의 위기’라는 좌담회에서 “좌파, 진보가 우리보고 극우, 수구라고 하던데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지.”라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비하하기도 했다. 발언의 원출처를 찾아보면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2013년 11월 19일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43) 71·72·73대 일본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설립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 연구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공익 재단법인. 당시에는 ‘세계평화연구소’였으나 2018년에 ‘나카소네평화연구소(Nakasone Peace Institute, NPI)’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관방장관 일본 정부 내각에서 국가의 기밀 사항, 인사, 관인 보관, 문서, 회계, 통계 따위의 총괄적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관방의장을 말한다. 국무대신에 해당한다.

이었던 스가(현 일본총리)는 “우리나라(일본)는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 (표지석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014년 1월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우리나라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



[사진 3-2] 류석준 교수의 안중근 의사 발언을 보도한 MBC 방송화면

‘아시아연구기금’의 창립 당시 구성원을 봐도 화려하다. 2005년 연세대 평교수 회는 ‘아시아연구기금’에는 ‘연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이사장을 보아도 연세대 12대 총장인 송자 교수가 2004년 6월 까지 이사장 임기를 채우고, 2004년 6월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연세대 15대 총장인 정창영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다. 연세대학교 법인이사장, 그리고 당시의 국제학대학원장, 동서문제 연구원장, 재무처장 등이 아시아 연구기금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여기에 류석준 교수는 창립 초기부터 2010년까지 프로그램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아시아연구기금’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연세대와 관련 없다는 말을 자주 되풀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과연 최근에는 어떨까?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교수가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사진에는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역임했던 김기정 교수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동안 논란이 야기되었다.

일본 측 인사는 아직도 여전히 위태롭다. 일본 측 명단을 보면 ‘오가타 타케주(尾形 武寿)’라는 인물이 눈에 띤다. 현재 ‘일본재단(사사카와 재단)’의 이사장을 맡은 인물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맡는 인물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는 재단에 아직도 ‘과거의 영광’이라며 과거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 열성인 일본의 극우 인사들과 다년간 <표2-2>처럼 심포지엄을 열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 극우재단을 볼 때, 우리나라 정치적 관점인 진보, 보수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위에 말했듯이 사사카와 재단은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에 돈을 뿌리기 때문이다.

<표 2-2> 일본재단 라이브러리 ‘아시아연구기금’ 지원금 목록

연도	사업명	단체명	조성금
2015	한일 심포지움	아시아연구기금	¥9,200,000
2014	아시아연구기금 한일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연구기금	¥6,054,424
2014	한일관계50년 연구사업 1965~2015	아시아연구기금	¥6,409,514
2013	아시아 연구 기금 한일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연구기금	¥6,030,000
1995	한일 공동 연구 기금의 설치	연세대학교	¥1,000,000,000

제 4 장 해외 후원 사례

1. 프랑스

사사카와 재단이 프랑스의 한 교수를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요지는 싱크탱크인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⁴⁴⁾가 프랑스-일본 수교 150주년을 자축하는 학술행사에서 1990년 3월 23일 총리령으로 공인된 공익 재단이다. "프랑스와 일본 사이의 문화적 관계와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랑스 지위의 비영리 민간 기관이다. 일본인과 프랑스인을 포함하여 15명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일본 재단(Foundation Franco-Japonaise Sasakawa)이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다. 이는 사사카와 재단이 설립한 재단이라는 것이 문제에 발단이었다. 실제로 사사카와 재단의 산하 재단이었다. 이처럼 사사카와 재단은 여러 이름으로 유럽·미국 등 각기 현지에 맞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일본학 및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는 관련 학자 50명이 유감을 표시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의 내용은 사사카와 료이치의 그동안의 행적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학자들은 프랑스 외무부에 참가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학술행사 개최 일주일여를 앞둔 시점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인 베르나르 쿠슈네르는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프랑스 외무부는 후원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사사카와 요헤이와 재단은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나 50명의 전체가 아닌 파리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의 카를린 포스텔 비네 교수만 집어서 소송을 제기한다. 프랑스 정치학회는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억압하기 위한 본보기 성격이 짙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사사카와 재단은 관련 소장을 전달함에서도 공개적인 학술장소에서 전달하며 모욕적인 방법을 택한다. 이에 프랑스 일본학회에서 "사사카와의 극우 행적은 수많은 학자가 검증한 사실이다. 학문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당사자인 카를린 비네 박사는 "한국의 일부 대학들에서 사사카와 관련 재단의 연구자금 유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한국 사회가 일본 극우 세력의 과거사 왜곡을 뒷받침하는 사사카

44) 국제관계 연구 및 토론을 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와 관련 재단에 관대하다는 점은 의외"라고 말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지목한 대목이기도 한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다.

2. 미국

사사카와 재단은 미국의 유수 대학인 컬럼비아대, 예일대, 버클리 등에 연구비 내용으로 기금을 후원하려고 했으나 재단의 성격을 아는 위 대학들은 자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요청에 액수는 백만 달러로, 용도는 일본어 강좌나 일본 관련된 학과만 사용하게 했다. 이처럼 미국 학계뿐만 아니라 세계 학계와 싱크탱크 등에 아직도 막대한 후원금을 뿐만 아니라 있다. 실제로 친일파 만들기 효과는 자명했다.

미국 내에서 친일 여론형성의 첨병 역할을 하는 '사사카와 평화재단' 이사장인 블레이 전 국장은 지난 8일 헤리티지재단이 전략적 컨센서스'라는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독도·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두 개의 선진국(한국과 일본)이 이 같은 종류의 분쟁을 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며 "독도를 국제화하고 서로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흡사 '독도 공유론'으로 들리는 발언이다. 이처럼 왜곡된 역사를 끊임없이 주입하니 이런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예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미국 NBC 아시아 통신원은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은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배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은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변화하며 일본을 중요한 본보기였다고 말할 것이다"고 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잘못된 역사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을까? 실제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U) 한인 풀뿌리 회의(KAGC)라고 불리는 미주 전국 각지에 거주 중인 회원으로 이루어진 가장 규모가 큰 한인 네트워크이다. 전국 회의는 매년 여름 31개 주 110개가 넘는 지역에서 600명 이상의 커뮤니티 회원이 모이고 있다. 비정당 비영리 단체인 KAGC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한인 공동체를 향상하고 한미 동맹에 이바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석 대표의 한 방송 인터뷰를 보면 사사카와 재단은 싱크탱크나 단체들에 '5만 달러', '10만 달러'씩 워싱턴DC 정가에 법정 한도 내에서 후원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자금을 계속 받는 의원들은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서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적은 다수당의 하원 의원도 일본 문제에 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반중국', '친일본'으

로 점철되어 있고, 민주당, 공화당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일본은 치밀하게 친일파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일본 극우재단의 후원을 통해 ‘신친일파’를 양성하는 과정과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1996년 연세대 사학과 박영재 교수가 ‘민족문제연구’에 기재한 “일본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의 문제-사사카와 료오이치 (笹川良一)의 경우”에서 모티브를 얻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987년 이후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설립되고 이들을 필두로 ‘식민지근대화론’이 부활하였다. 1988년부터 3년간 ‘도요타재단’으로부터 16명의 한·일 연구자 연구에는 ‘도요타 재단’이라는 곳에서 당시 400만 엔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96년 6월에는 ‘일본재단(당시 일본선박진흥회)’이 10억 엔을 출자해 ‘아시아연구기금’을 만들었다.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이공계나 기초의학 분야에만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연세대가 제안했으나 ‘일본재단’ 쪽에서 거절한다. 이유는 본인들이 지원한 돈이 연구 방향에 대해 일정부분은 개입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처럼 ‘아시아연구기금’은 연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연세대’ 와는 관련이 없는 단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는 몇 해째 계속 리뉴얼 중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에게는 연구 내용이나 사업내용을 쉽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극우재단의 왜곡된 역사관으로 인한 한·일 양국의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진 본연구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극우재단은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에 자민족을 위해서 후원을 진행한다. 그에 따른 문제는 피해국인 한국에서 한국인 학자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창하고,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일본을 옹호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제국주의 시절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에게 또 한 번에 손해가 끼쳐지고 있다. 이제는 도를 넘어서서 ‘일제강점기’를 친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 극우재단의 지원을 받은 학자의 연구는 ‘확증 편향적’인 연구와 ‘부조적 수법’을 활용해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안병직 교수가 설립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이영훈 교수와 이우연 연구위원을 공동 저자로 한 ‘반일종족주의’라는 ‘친일 서적’이 탄생한 곳이다. 이들의 주장은 일본 극우파가 역지를 부리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강제노역 또한 자발스러운 참여했고, 임금을 일본인보다 더 받았다는 일본인 관점에서 유리하게 기록한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독도는 증거가 많아서인지 꼭 한국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둘째, 1996년 연세대 박영재 교수의 사사카와 재단 설립자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일본을 대표하는 ‘파시스트’가 되는 과정을 통해 극우재단과 학술기관의 관계성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다. 필자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위험성을 인지한 만큼 관계 변화가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일본 극우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국내에 있는 ‘신친일파’와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3년 4월 23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일본 총리인 ⁴⁵⁾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서울대의 한 분이 일제 강점기에 왜 (조선의) 인구가 증가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고 발언했다. 이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연구를 두고 하는 발언이었다.



[사진 5-1] 2013년 4월 23일 日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전 총리의 식민지배 미화 발언에 인용

한국 학자가 일본에 우호적인 내용의 연구를 발표하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을 이를 ‘일본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극우 교과서’

45) 일본의 극우 정치인. 제90·96·98대 내각총리대신으로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총리이다. 제56·57대 총리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외손자이다.

가 폐지되고 있고, 많은 일본 국민이 한국 문화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는 시점에 극우파들의 이런 행동은 퇴행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평화 헌법 9조 개정’을 외치고 아직도 과거 폐권을 쥐고 있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었던 역사에 대해 반성이 아닌 덮으려고만 하는 행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주변국을 향해 불신만 조장하는 일본 극우파는 현실을 자각하고 애육을 멈추는 길이야 말로 동아시아의 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반성이 없는 왜곡된 역사를 재생산하고, ‘친일파’를 양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불신과 오해만이 가득한 날이 반복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정리함으로써 카를린 포스텔 비네 박사가 말한 ‘성실한 감시자’, ‘용감한 고발자’가 되어 이들이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알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를 넘어서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셋째,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종족주의’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본을 위한 연구를 하거나 ‘식민사관’에 갇혀있는 학자가 국내에는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고, 현학적인 수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연구자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다. ‘조선사편수회’에서 10여 년 동안 일본을 위한 한국사를 연구한 ‘이병도’를 시작으로 친일 학자가 주장한 틀에서 벗어나면 학위도 주지 않았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던 역사학계의 굴종적인 과거를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이다. 더 일본은 넘어서질 못할 나라가 아니다. 이제 ‘식민사관’,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사를 바로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와 같이 ‘친일 연구’를 드러내는 곳은 오히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교적 수월했다. 더 어려운 사례는 교묘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일반인은 알 수 없게 만드는 ‘친일 학자’의 연구를 더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연구기금’은 리뉴얼을 광계로 일반인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연구로 예시 드는 것이 한정적이었음을 밝힌다. 본고는 ‘낙성대경제연구소’와 ‘아시아연구기금’에 그쳤지만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밝혔듯이 ‘일본 극우파’에게 지원을 받은 사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사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상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박영재(1996), “특별기고 : 일본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의 문제 – 사사카와 료오이 치 (笹川良一)의 경우”,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 10(0), pp. 9-18.
2. 박찬승(2014)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식민지조선근대화론,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사학사학보』 30, pp. 209-252.
3. 이귀전·장인수(2005), 日극우 "일본재단" 곳곳에 돈뿌려. 세계일보,
4. Richard Halloran(1974), "Little-Known Japanese Wield Vast Power", *The New York Times*
5. 호사카유지(2020), 신친일파. 봄이아트북스
6. 연세대학교 교수협의회 자료집(2005), “누가 일본 극우세력의 검은 돈, ‘아시아 연구기금’을 연세로 끌어들였는가?”, 연세대학교 교수협의회
7. 最後の「フィクサー」児玉誉士夫とは何者だったのか, 「週刊現代」, 2016年12月10日号より
8. 「戦後70年」特別鼎談 児玉誉士夫 笹川良一 濑島龍三
四元義隆ほか「黒幕たちの戦後史」を語りつくす 保阪正康×佐高信×森功
9. 資産総額上位100財団 (2018年度), 公益財団法人 助成財団センター
10. 「慰安婦像をめぐる謎」, 笹川陽平 Canpanブログ, 2017年02月24日
11. 産経新聞【正論】「憲法改正より修正が分かりやすい」 [2020年10月08日]
12. 최우현, 한국에 200억 지원한 일본재단, 활동 내역 살펴보니 [일본 어제오늘]
아시아연구기금에 설립 자금... 위안부 망언에 독도 도발까지, 오마이뉴스, 2019. 10. 07
12. 김현,'위안부 소녀상' 작가부부 "새로운 상징 만들겠다", 연합뉴스, 2014.08.18.
13. 길윤형, 위안부 연구 '일 최고 권위자' “한·일 12·28합의 백지화해야”, 한겨레, 2016.01.08
14. 産経新聞『正論』ミャンマーで外交の立て直しを, 産経新聞, 2012年11月12日
15. 도리우미 유타카,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지식산업사, 2019. 09. 05

16. 유튜브채널 '아무튼, 주말' 안병직 교수 인터뷰
17. "강제동원 없다" 한국 학자의 UN 발언...日 극우 기획 / YTN 2019.08.25
18. 안병직·이영훈, 일본 돈 받은 '식민지 연구', 오마이뉴스, 김종성, 2006. 12. 04
19.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이영훈, 안병직, 기파랑 (2007)
20. "소녀상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일본 극우 관점이죠", 오마이뉴스, 김시연, 2020.08.02
21.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의종, 정안기, 이우연, 반일 종족주의, 미래사, 2019. 07. 10
22. 전강수,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한겨레출판사, 2020. 07. 10

Abstract

A Case Study of Japanese Far-right Foundation and the Contribution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Park, Jungwoo

The reason why Japan's far-rightists continue to train pro-Japanese group can be seen for political reasons.

First of all, Japanese far-rightists use the results of their studies by domestic scholars to use them for domestic politics. For example, on April 23, 2013, at the budget committee of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Abe glorified colonial rule by saying "There is also an analysis about 'Why did the population of Joseon increase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by on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which caused controversy in Korea. The remarks and research materials made by the "New pro-Japanese group" forces are used as political materials by Japan's ultra-rightist political forces.

The second is to promote conflict in Korea. In fact, Professor Yuji Hosaka of Sejong University once appeared on a broadcast and spoke about the far-right foundation's approach to "New pro-Japanese group." He once mentioned some people approaches to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and embraces them with money. In some cases, these students return to Korea to become "New pro-Japanese group" or to work for Japan. In fact, those who studied abroad in Japan and were sponsored often speak in favor of Japan. Professor Ryu Seok-chun mentioned abou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s one of those who benefited from his tenure as secretary-general of the Asian Research Fund. Their remarks have caused a great deal of controversy in the country, embarrassing the majority of Koreans. This method of internal disturbance is often used by the country that colonized. At the national level, it seems necessary to have a law that can punish those who cause damage through fake news or distorted history.

The third is aimed at glorifying the imperialist past and effectively conveying the distorted histor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a person from a country directly affected makes a statement advocating Japan's past actions, the effect would be doubled. The more such voi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ore their stories cannot be ignored. At its center is the Japan Foundation and the Institute of History. It is also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is sitting on the sidelines.

The above methods are often used by countries that have colonized. Britain, for example, has made India and Pakistan easier to govern by implementing religious separatist policies.

This continued even after India's independence, which resulted in internal disputes rather than anger towards Britain. The way Japan uses it is no different.

They follow the logic claimed by the far right in Japan and gloss over the people as if it were objective data. The plan is intended to easily get what the ultra-rightist politician wants and to shift responsibility to the other country in case of an emergency. Don't forget that this is what we've been through in the midst of Japanese colonial era. Because of that we should act as a watchdog. Faced with strong resistance due to the reaction of unauthorized rule, Japan has shifted to cultural rule and trained many pro-Japanese groups. They remember the experience of having a greater effect with less power. The logic of "New pro-Japanese group" began with the study of Japanese far-right scholars, most of whom have studied abroad in Japan. There is no law against repeating past history, and we should keep ours eye on it and try to break down colonial history. It is a serious matter to be overcome, and it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o straighten out the nation in the next 50 years.